

정답

01	①	02	②	03	⑤	04	②	05	③
06	⑤	07	③	08	⑤	09	④	10	②
11	④	12	③	13	④	14	⑤	15	④
16	②	17	③	18	①	19	③	20	①
21	④	22	③	23	④	24	①	25	⑤

01

2024 행정사

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.
- ② 불법주차,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.
- 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.
- 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.
- ⑤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, 교통정리 등이 있다.

해설

- ① (X), ③ (O)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효과[ex 공장 가동으로 주변 주민들이 입는 피해(환경오염)]를 의미하며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. 긍정적 외부효과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(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)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소생산의 결과를 가져옵니다.
- ④ (O) 부정적 외부효과는 과다공급되기 쉬운 조세부과를 통해 적은 양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.

정답 ①

02

2024 행정사

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간관계론 - 사회적 능률성
- ③ 신공공관리론 - 효율성
- ⑤ 신행정론 - 사회적 형평성
- ② 행정행태론 - 효과성
- ④ 과학적 관리론 - 기계적 능률성

해설

- ④ (X) 행정행태론 - 의사결정의 합리성 강조(정책 효과성 X)

정답 ②

03

2024 행정사

오스본(D. Osborne)과 게블러(T. Gaebler)의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	기준	전통적 행정	신공공관리
ㄱ	정부역할	노릇기	방향잡기
ㄴ	서비스공급	독점적 공급	경쟁 도입
ㄷ	행정가치	관료 중심	고객 중심
ㄹ	행정주체	집권적 계층제	참여와 팀워크
ㅁ	관리방식	업무 중심	규칙 중심

- ① ㄱ
- ② ㄴ
- ③ ㄷ
- ④ ㄹ
- ⑤ ㅁ

해설

- ⑤ (X) 법령, 규칙 중심의 관리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의 행정관리 기제이고, 임무 중심 관리는 신공공관리의 관리 기제입니다.

정답 ⑤

04

2024 행정사

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?

- ① 일몰 예산제도
-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
- ③ 영기준 예산제도
- ④ 계획 예산제도
- ⑤ 자본 예산제도

해설

단위원가 × 필요사업량 = 예산액 방식으로 계산하여 예산배정을 하여 투입(원가와 양)과 산출(사업과 활동)을 연결하는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.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일반 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기 용이합니다.

정답 ②

06

2024 행정사

「공직자윤리법」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?

- ① 주식백지신탁
- ② 이해충돌 방지 의무
- ③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
-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
- ⑤ 내부고발

해설

- ① (O)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4
- ② (O) 「공직자윤리법」 제2조의2
- ③ (O)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, 제10조
- ④ (O)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
- ⑤ (X)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있습니다.

정답 ⑤

05

2024 행정사

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계층제를 통한 통제
- ㄴ. 감사원을 통한 통제
- ㄷ.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
- ㄹ.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
- ㅁ.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
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ㅁ
- ④ ㄴ, ㄹ, ㅁ
- ⑤ ㄷ, ㄹ, ㅁ

해설

ㄱ. 계층제를 통한 통제, ㄴ. 감사원을 통한 통제, ㅁ.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→ 공식 · 내부통제
 ㄷ.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→ 비공식 · 외부통제
 ㄹ.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→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→ 비공식 · 내부통제

정답 ③

07

2024 행정사

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이용(移用)이란 세항·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.
- ② 전용(轉用)이란 장·관·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.
- ③ 이체(移替)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.
- ④ 명시이월(明示移越)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.
- ⑤ 사고이월(事故移越)이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.

해설

- ① (X) 세항·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 → 전용
- ② (X) 장·관·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 → 이용
- ③ (O)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- ④ (X)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.
- ⑤ (X)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.

정답 ③

08

2024 행정사

다음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전의결의 원칙- 준예산
- ② 한정성의 원칙- 사고이월
- ③ 통일의 원칙- 교육세
- ④ 단일의 원칙- 특별회계
-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- 기금

해설

- ① (O) 준사전에
- ② (O) 이전/예추/월계부
- ③ (O) 통일성의 원칙 예외로 목적세가 있으며, 교육세는 목적세 중 하나입니다.
- ④ (O) 특단통
- ⑤ (X) 기금의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견해도 있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. i)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르면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'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' 등이 있다고 봅니다(신무섭, 주상헌 저 '재무행정학'). ii) 그러나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르면,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30일 전까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으로 본다면 완전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참고로 「국가재정법」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5번을 정답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, 「지방재정법」상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외입니다.

「국가재정법」

제53조(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)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(이하 "수입대체경비"라 한다)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.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(轉貸)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 ③ 차관물자대(借款物資貸)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.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,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.

「지방재정법」

제34조(예산총계주의 원칙)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정답 ⑤

09

2024 행정사

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.
- ②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다.
- ③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.
- ④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·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.
- ⑤ 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, 범죄의 예방·진압 및 수사 등이다.

해설

- ① (O)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, 2021년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
- ② (O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③ (O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- ④ (X)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.
- ⑤ (O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

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경찰의 임무)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
 2. 범죄의 예방·진압 및 수사

제4조(경찰의 사무)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1. 국가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. 다만,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.
 2. 자치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
 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

제18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.
 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
정답 ④

10

2024 행정사

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- ② 국가보훈처
- ③ 여성가족부
- ④ 재외동포청
- ⑤ 질병관리청

해설

- ② (X) 2023년 6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·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되었습니다(「정부조직법」 개정).

정답 ②

11

2024 행정사

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
- ② 국민권익위원회
- ③ 금융위원회
- ④ 방송통신위원회
- ⑤ 원자력안전위원회

해설

- ④ (X)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, 나머지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.

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위원회의 설치)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정답 ④

12

2024 행정사

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, 인력의 효율적 활용, 공무원의 공직규범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.
- ②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.
- ③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.
- ④ 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.
- 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.

해설

- ① (O) 중앙인사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- ③ (X) 1999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설치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는 비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입니다. 따라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- ④ (O) 행정부의 인사기관에는 중앙인사기관, 부처 인사기관,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 등이 있습니다.

정답 ③

13

2024 행정사

공급의 담당주체와 수단의 결합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구분		공급주체	
		공공부문	민간부문
공급 수단	권력	(가)	(나)
	시장	(다)	(라)

- ① 가: 일반행정, 나: 책임경영, 다: 민간위탁, 라: 민간기업
- ② 가: 책임경영, 나: 일반행정, 다: 민간기업, 라: 민간위탁
- ③ 가: 민간기업, 나: 민간위탁, 다: 책임경영, 라: 일반행정
- ④ 가: 일반행정, 나: 민간위탁, 다: 책임경영, 라: 민간기업
- ⑤ 가: 책임경영, 나: 민간위탁, 다: 일반행정, 라: 민간기업

해설

- (가) 공급 수단: 권력, 공급주체: 공공부문 → 일반행정(정부의 기본 업무, 법령상 규정 업무)
- (나) 공급 수단: 권력, 공급주체: 민간부문 → 민간위탁
- (다) 공급 수단: 시장, 공급주체: 공공부문 → 책임경영(공적 책임이 강한 경우)
- (라) 공급 수단: 시장, 공급주체: 민간부문 → 민간기업(시장 탄력적 공급)

정답 ④

14

2024 행정사

현대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간행태의 발전과 쇠신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인간을 자아실현인 · 복잡인으로 파악한다.
- ② 가치의 다원화 및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.
- ③ 효과성 · 생산성 · 민주성 · 대응성 · 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중시한다.
- ④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· 유기체적 개방체제로 파악한다.
- ⑤ 조직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.

해설

- ①, ② (O) 현대조직이론에서는 인간이 거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변성을 지닌 복잡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조직을 복잡한 체제로 보기 때문에 획일화나 법칙화를 피하려 합니다. 인간을 자아실현인 · 복잡인으로 파악하며, 현대조직이론의 가치 기준은 다원화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으로 선정되는 문제들은 크게 다양화되어 있습니다.
- ③, ④ (O) 현대조직이론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 · 유기체적 · 개방체제로 파악하며, 효과성 · 생산성 · 민주성 · 대응성 · 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중시합니다.
- ⑤ (X) 조직에서 변동 · 갈등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조직발전을 중시합니다.

정답 ⑤

15

2024 행정사

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- ②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.
- ③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경력직 공무원이다.
- ④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.
- ⑤ 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해설

- ① (X) 경력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② (X)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→ 정무직(특수경력직)
- ③ (X)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.
- ④ (O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제2항
- ⑤ (X) 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 → 일반직(경력직)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국가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“경력직공무원”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2. 특정직공무원: 법관, 검사, 외무공무원,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육공무원, 군인, 군무원,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, 국가정보원의 직원,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③ “특수경력직공무원”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무직공무원
 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
 나.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(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)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정답 ④

16

2024 행정사

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(voucher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.
- ② 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는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전자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.
- ④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.
- ⑤ 노인, 장애인, 보육 정책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.

해설

- ② (X) 바우처는 소비자가 공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(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 X).
- ③ (O)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전자 바우처를 도입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,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전자 바우처로 운영 중입니다.
- ④, ⑤ (O)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노인, 장애인, 그리고 보육정책 등에서 이용권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

정답 ②

17

2024 행정사

「국가공무원법」상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?

- ① 파견
- ② 전보
- ③ 전입
- ④ 전직
- ⑤ 겸임

해설

- ① (X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의4
- ② (X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조
- ③ (O) 전입에 대한 설명입니다.
- ④ (X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조
- ⑤ (X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의3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5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5. “전직(轉職)”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.
 6. “전보(轉補)”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(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제28조의2(전입)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·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32조의3(겸임)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32조의4(파견근무)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·공공단체·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 ③

18

2024 행정사

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부이다.
- ② 부처 간 장벽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연계·통합이 가능한 정부이다.
- ③ 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.
- ④ 국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.
- ⑤ 참여·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이다.

해설

- ① (X) 스마트 전자정부란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간 융·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, 국민의 참여·소통으로 진화(進化)하는 선진화된 정부를 의미합니다(출처: 행정안전부). 스마트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(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X).

정답 ①

19

2024 행정사

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세종특별자치시
- ② 경상북도 고령군
- ③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
-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
- ⑤ 전라남도 순천시

해설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합니다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합니다.

「지방자치법」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
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(행정시의 폐지·설치·분리·합병 등) ① 제주자치도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.
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(이하 “행정시”라 한다)를 둔다.

정답 ③

20

2024 행정사

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「지방자치법」상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.
- ②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.
- ③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.
- ④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·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.

해설

① (O)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됩니다.

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(주민의 자격)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.

- ② (X)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받은 자치권 → 전래권
- ③ (X)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

「지방자치법」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) ③ 특별시·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, 군에는 읍·면을 두며, 시와 구(자치구를 포함한다)에는 동을, 읍·면에는 리를 둔다.

- ④ (X)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 → 고유권
- ⑤ (X) 국방·외교는 국가사무입니다.

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(국가사무의 처리 제한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1. 외교, 국방, 사법(司法),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

정답 ①

21

2024 행정사

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만족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하는 정도의 대안을 결정한다.
- ② 최적모형은 비정형적인 정책결정 시 창의성이나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 한다.
- ③ 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하에서의 정책결정양태를 설명한다.
- ④ 관료정치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해결안을 선택하고,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 한다.
- ⑤ 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.

해설

- ④ (X) 엘리스 모형 중 관료정치모형은 상이한 목표와 정보 및 자원을 가지고 (의견이 동일한 X)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정치적인 타협과 흥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.

정답 ④

22

2024 행정사

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마르크스주의 -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회와 같다.
- ② 엘리트주의 -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.
- ③ 무의사결정 -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.
- ④ 제도주의 -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·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.
- ⑤ 다원주의 -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.

해설

- ① (O) Marx는 경제관계가 정치, 문화 등의 모든 사회관계를 지배한다는 논리에 따라,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장악한다고 봅니다.
- ③ (X) 무의사결정은 엘리트 계층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전략입니다.
- ④ (O) 제도론적 접근은 법이나 제도를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이것을 통해 현상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입장입니다.

정답 ③

23

2024 행정사

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.
- ② 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.
- ③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.
- ④ 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.
- ⑤ 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하거나 행사한다.

해설

- ①, ③ (X) 주민소환에 관한 설명입니다.
- ②, ⑤ (X)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입니다.
- ④ (O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주민소송) 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,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,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·임차·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·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·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정답 ④

24

2024 행정사

우리나라는 도·농 통합이나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데,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?

- ① 청주시 + 청원군 = 청주시
- ② 창원시 + 마산시 + 진해시 = 창원시
- ③ 여주시 + 여천시 + 여천군 = 여주시
- ④ 춘천시 + 춘천군 = 춘천시
- ⑤ 천안시 + 천안군 = 천안시

해설

- ① 청주시 + 청원군 = 청주시: 2013년(「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」)
- ② 창원시 + 마산시 + 진해시 = 창원시: 2010년(「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」)
- ③ 여주시 + 여천시 + 여천군 = 여주시: 1998년(「전라남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)
- ④ 춘천시 + 춘천군 = 춘천시: 1995년(「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)
- ⑤ 천안시 + 천안군 = 천안시: 1995년(「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)

정답 ①

25

2024 행정사

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정책이 내포하는 목적가치를 중요시 한다.
- ②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.
- ③ 질적 분석을 중요시 한다.
- ④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.
- ⑤ 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.

해설

- ①, ②, ③, ④ (X) (협의의) 정책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.
- ⑤ (O) 관리과학이란 의사결정에 최적대안을 탐색하는데 활용되는 계량적 분석기법입니다. 양적분석을 강조하고, 수량측면에 초점을 둡니다(수리적 모형 구성과 계량적 분석을 중요시함)

정답 ⑤